

김성주 제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나아가겠다”

연금개혁 선도 통한
지속가능성 강화
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금 수익률 제고 등
다섯가지 약속 제시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제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오후 3시 전북 전주 본부 온누리홀에서 취임식을 열고 새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공단 임직원과 지역 인사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나아가겠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과 공단의 책임 강화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2017년 제16대 이사장 재임 당시를 회고하며 “국민연금의 주인은 대통령도 재벌도 아닌 국민”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차단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결과, 국민연금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성과도 강조했다. 가입자 2,160만명, 수급자 769만명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은 300만명 이상 수급자가 등장할 만큼 제도적 위상이 달라졌으며, 기금 규모는 1,36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는다.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 7.1%, 지난해 15%에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오후 3시 전북 전주 본부 온누리홀에서 김성주 이사장 취임식을 열고 새 출발을 알렸다. 사진은 이날 취임식에서 김성주 신임 이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달하는 성과 역시 국민연금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운영 방향으로 다섯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첫째는 연금개혁 선도를 통한 지속가능성 강화다. 김 이사장은 18년 만의 연금개혁과 보험료 인상으로 시간을 벌였지만, 2단계 개혁을 통해 추가적인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수급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 등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다. 평균 연금 수령액이 66만 원 수준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일용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제도 안으로 포괄하고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셋째는 기금 수익률 제고와 사회적 책임의 병행이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유니버설 오퍼’로 규정하며 ESG 원칙 강화와 책임투자 확대를 예고했다. 특히 공공주택 투자를 통해 주거 문제 해결과 인구 감소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넷째는 공공신택 등 복지서비스 강화다. 발달장애인 공공신택과 치매

신택을 통해 노후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는 지역사회와의 동등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북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은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국민의 노후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끊임없이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새로운 6년이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원팀 전북’으로 미래 준비

‘도지사 출마’ 정현을 익산시장, 도내 시군 순회 나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정현을 익산시장이 도내 주요 시·군을 잇따라 방문하며 지역 현안 점검과 ‘원팀 전북’ 구상에 나섰다.



표류, 새만금 신공항 사업 대응 미흡,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체감 변화 부족 등 전북 현안에 대한 문제점도 공유했다.

정 시장은 “도민과 소통하며 현안을 정면으로 해결하는 결단력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고창의 산업·도시재생 사례, 완주의 수소산업 성장, 군산의 이차전지·재생에너지 중심 산업 구조 등을 점검하며 전북 미래산업의 가능성도 제시했다.

정 시장은 “전북의 잠재력을 변화로 이끄는 추진력이 중요하다”며 “익산에서의 행정 경험을 전북 전역으로 확장해 전북만의 발전 속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춘 기자

“박춘원 전북은행장 내정 재검토하라”

‘전주시장 출마’ 조지훈 민주 원내대표 특보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춘원 JB우리카페탈 대표의 전북은행장 선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북은 김건희·윤석열 정권의 국정 및 국헌 문란과 연루된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사가 전북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의 수장을 맡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특보는 전북은행의 역사와 역할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1969년 설립된 전북은행은 전국 지방은행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이자 JB금융지주 그룹의 핵심 축으로 성장해 왔다”며 “그 배경에는 전북의 대표 금융기관을 지켜내고 키워온 도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북은행은 지역경제의 발전 동력이자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도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의 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전북은행의 역사와 소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사로는 이러한 기대를 실현할 수 없다”며 “문제가 되는 인사의 배경을 알고도 같은 선택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선임 철회를 촉구했다.

조 특보는 끝으로 “전북은행은 박춘원 JB우리카페탈 대표의 은행장 선임을 전면 백지화하고, 금융의 공적 책임과 지역사회의 공헌에 걸맞은 인사를 다시 추천해야 한다”며 강력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순창군의회, 내년 군 예산 5776억7400만원 의결

올 한해 의사일정 마무리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17일 제 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을 의결했다. 또한 11월 27일부터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희)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

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억 5,856만 9천원을 삭감해 수정의결했으며, 2026년도 순창군 예산 규모는 5,776억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5억 8,707만7,000원이 증액됐다.

한편, 이날 조정희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반소리 5대 명창 선양사업’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한, 순창군의회는 오수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뱀 허위지역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뱀건설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민주평통 전북-부산, 무주군 일대서 교류행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위원장 김영복)는 지난 16일 부산지역회의(부위원장 박사익)를 초청해 무주군 일대서 교류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전북지역과 부산지역 자문위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교류행사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시대를 준비하며 동서화합으로 갈등과 분단을 넘어 함께 만드는 평화를 위한 제22기 민주평통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

무주군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교류행사는 효재의 뜰 이효재 대표의

‘전북-부산지역회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평화강연’을 주제로 진행됐다.

환영식에 참석한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역을 방문한 전북, 부산지역 자문위원을 환영하며 “평화 공존에 민주평통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전북부위원장은 “전북지역회의와 부산지역회의의 교류행사를 이어온 지 19회째를 맞아 22기 전북-부산 자문위원들이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의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입법정책 분야 상호 교류

도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협약 체결

지역발전 위한 입법정책 과제 자문 등

이관후 조사처장, 도의원 등 대상 특강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7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입법정책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 의장을 비롯한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서난이 대변인,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은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조사분석 능력을 높여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기간은 2년이다.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

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정책 자문 및 간담회 개최 △연구보고서 및 정책자료 공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관련 공동연구 △지방의회 입법정책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입법정책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의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력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정부의 입법 역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입법정책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중앙의 입법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신정읍-신계동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를”

완주군의회, 건의안 채택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지난 16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이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 자립 촉진을 위한 신정읍-신계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정읍-신계동 송전선로 사업이 경과지 주민의 건강·안전·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장거리 송전 중심의 전력정책이 분산에너지 확대라는 국가 정책 방향과 충돌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유이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해당 사업은 주민대표 구성 허위와 의견수렴 부족 등 절차적 정당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음에도 한전은 사실상 사

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사회 갈등을 키우고 주민 불신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후 정부가 표방한 핵심 가치인 ‘수요지 인근 전력 생산·소비 체계’임에도, 초고압 장거리 송전망 확대는 정책 일관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입지선정 위원회의 주민대표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2025년 2월 법원도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음에도 한전이 최저 경과대역 확정을 강행하면서 주민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등에 송부해 정책 개선과 사업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남원시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하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전국행동 출범식 참석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국회 앞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를 외쳤다.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김영태 의장을 비롯한 김한수 부의장, 소태수 의원, 이숙자 의원은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단지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 출범식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역 생존권 파괴 및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역의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초고압 송전탑 건설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대책위원들과 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총연맹, 에너지정의행동



2025. 12. 16(화) 국회본관 앞 -정원내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 출범식 기자회견서배우(왼) 나영민(가운데) 등 50여 개 단체에서 온 천여 명이 함께했다.

김영태 의장은 “시 의회는 초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엄중히 세우고, 끝까지 시민의 편에서 합리적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주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